

자치연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학생회 운영 → 9/11/26 목요일까지
토론

성명서

성명서

자치권을 관장하는

"안타깝게도"

제11대 총학생회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0일 새벽(0~1시 사이) 제 11대 총여는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두입술과 생활 도서관의 물품들을 사전 합의 없이 철거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일방적으로 연락 수단을 두절시킨 채 25일 현재 6일째 문을 잠근 채 행적을 감추는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일차적으로 20일 당일에 다시 공간 사용에 대한 재논의의 자리를 갖겠다고 했던 바로 전 회의의 합의 내용을 이행치 않았다는 점과 학생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자치 단체를 내몰았다는 점에서 많은 학우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세대 내에는 활발한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은 일반 학우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대학 내에서 다른 학우들과 함께 풀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된 이유는 학교 당국이 정당한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학생회가 모든 공간과 재정, 그리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그 '권력'이 학우들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라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시혜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베풀면서 아무것도 갖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회는 자신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학우들의 입장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마련해주고 여러 제도적 장치 - 예를 들어, 예산자치제 등 - 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내의 다양한 입장들이 효율적으로 소통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실험들은 매년 학생회 선거 때마다 각종 선본의 공약과 그들의 활동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1대 총여학생회의 '강제철거 사태'는 현 학생회 제도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흐름과는 정반대로, 자치 활동에 대한 물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당선 후에 그들은 각 언론지에 자치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행되고 있는 총여학생회의 폭력적인 모습 속에서는 학우들과의 이러한 약속 이행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는 것이 곧, 모든 공간들을 독점하고, 독단적으로 사안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현실에 문제제기 하고, 자발적인 모임들을 꾸리는 모든 학생들을 '소수의 이익 단체'로 몰아 붙이면서 '일반학우'들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이면서, 또한 결국 총여학생회 집행부만의 활동과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건이 발생한 지 6일이 되어도 연락이

두절되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현 총여의 태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총여의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학우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겠다는 무책임하고도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우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두입술과 생활도서관에 대한 제11대 총여 학생회의 '강제철거 사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물품들을 철거해버렸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학우들의 자치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더불어, 이는 학우들의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줘야 할 학생회로서의 임무마저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권리에 대한 탄압이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학생회'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현 사태에 대해서 제 11대 총여학생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관련, 공개하라나 세력화 막아야.